



[해설] 금융, 플랫폼이 되다 카카오뱅크 715일만에 1000만 고객 03



Economy

코스피	2086.66 (0.00)	코스닥	681.17 (0.00)
금리 (우대 3년)	1.42 (+0.01)	환율 (원/달러)	1179.20 (+5.70)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JY, 비상계획 전격 가동

日규제 품목 긴급물량 확보한 듯 DS·디스플레이 경영진 긴급소집 수급현황, 대응방안 등 중점 논의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중심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진두 지휘 하에 일본 수출 제재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4일 세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3일 반도체 부문인 DS와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DS 부문장인 김기남 부회장과 메모리사업부장 진교영 사장, 시스템LSI 사업부장 강인엽 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급 현황과 영향,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일본 수출 제재가 확대되거나 장기화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수립을 주문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TV 등 다른 주력 분야에도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에 미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 부회장은 단기 현안 대처뿐 아니라 큰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흔들리지 않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날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3개 품목 긴급물량을 확보했다는 일본 출장 성과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이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에서는 이번 물량이 급한 불은 끌 정도의 수준이며, 현지 생산업체들로부터의 직접 수입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발효 전통에 시도입... 맞춤형 영양 제공시대 열린다

# 푸드테크, 바이오 2배 9300조

### 2019 푸드테크 포럼

식품 R&D 광범위, 개방형 혁신 필요 음식의 전통깊은 韓, 잠재력 높은 시장

먹거리의 미래 가치가 8조 달러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려 9342조원,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가치 추정치(5000조원)보다 2배 가까이 크다.

동력은 음식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푸드테크'다. 의사들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약 대신 대체육(식물성 고기)과 식물성 계란을, 당뇨 환자엔 당을 낮춘 쌀을 처방한다. 밥이 약이 되는 시대다. 파장은 크다. 인간을 먹이기 위해 잔인하게 도살되던 가축들은 초원으로 나가고, 축사가 뿔내던 이산화탄소는 줄어든다. 사람도, 동물도, 지구도 모두 '지속 가능한' 세상, 푸드테크가 꿈꾸는 미래다. <관련기사 L7, L8면>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푸처 푸드테크 코리아'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들은 음식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며 "꽤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리콘밸리 푸드테크 투자 전문기업 피프티이어스(Fifty Years) 창업자 세스 배넌 대표는 "사람들은 가축을 식용으로 사육하지 않을 것이고, 비만과 고혈압 등 질병의 근원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과 설탕을 교체할 것"이라며 "미생물, 바이러스, 단백질 등 유전체가 개인화돼 개인 맞춤형 영양을 제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총괄본부장은 "30조원의 구매력을 가진 밀레니엄 세대는 음식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검색하고 영양정보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며 "먹는 행위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진다. 이 흐름은 향후 몇 십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푸드테크의 발전을 위해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식품과 결합하는 기술은 광범위하다.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해 배양육을 만들고, 버섯과 콩의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해 고기, 달걀, 우유를 만든다.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데이터를 분석

하고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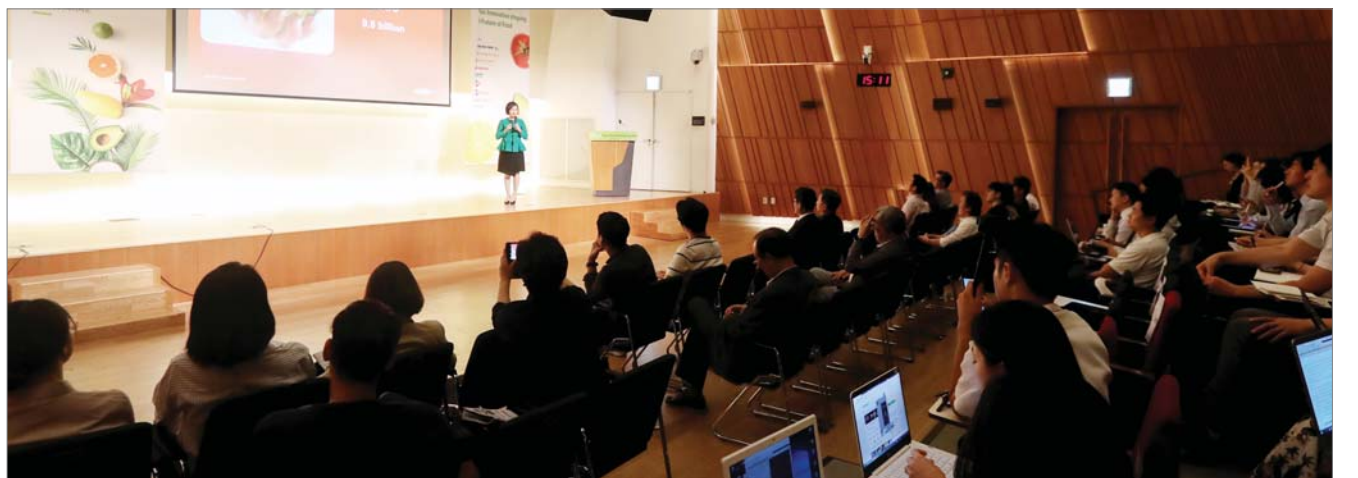
윤호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은 "식품 연구개발(R&D)은 화학뿐 아니라 미생물, 물리학까지 분야가 광범위해 문제를 혼자 풀어 나가기 정말 어렵다"며 "식품 산업이야말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말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음식에 대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한국은 푸드테크의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신디 오우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국가인 한국은 음식의 신선도, 영양정보, 건강한 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맛있고 좋은 식음료에 대한 젊은 세대의 구매욕구가 큰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세스 배넌은 "한국은 된장과 김치와 같이 발효 음식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다 IT는 물론 로봇,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기술 발전이 빠른 국가"라며 "이런 기술들을 식품 제조에 적용하고 음식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아시아태평양 총괄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푸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19)'에 참석해 '미래 식품시장의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日 수출규제 영향분석 제각각

# 정계·학계 “국내산업 큰 피해” vs “외교적 해결 필요” 관련 업계

정계계가 일본 수출 규제를 두고 제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 규제품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우려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전문가가 94%가 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관련 기업인과 학계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수출 제재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문가도 62%나 있었다.

앞서 한경연은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에서 일본 무역 규제에 따른 한국 GDP 하락이 2.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측 피해는 0.04%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59.9%가 일본 수출 규제에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수출규제 피해를 우려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세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행동에도 나섰다.

반면 정작 실제 피해자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LG디스플레이 강인범 부사장은 최근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반도체에 비해 크지 않다고, 이미 대체제를 찾아 테스트 중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우려가 실제보다는 다소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출 규제 이후에도 주력 품목인 DR램에 쓰이는 소재는 정상 수입된 영향도 있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극자외선(EUV)에 쓰이는 포토 레지스트(감광제)는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지만,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만큼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밖에는 대부분 대체재를 거의 마련한 상황"이라고 낙관했다.

업계 전망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수출 규제 품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UV와 올레드 패널 생산에 쓰이는 소재임이 확정적이긴 하지만, 같은 소재라도 실제 품목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수출 규제가 무조건적인 제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배경도 있다. 일본은 한국을 주요 소재 수출 관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뿐, 무역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철차를 끝낸 후에도 수출을 규제할 때 문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쟁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적 의도를 담은 주장에 더 주목이 쏠리면서 오히려 실제 업계가 처한 상황이나 위기 해결 방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세계 총수들을 불러모아 '쇼통'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일 정부가 대립하면서 발생한 일임에도, 재계를 끌어들이며 기업들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했다는 얘기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피해를 과장해 국내 반도체 역량을 폄하하는 움직임도 업계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지 소재 업체보다는 금융권 관계자를 만나 상황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